

잠재계층모형(LCA)을 활용한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유형 분류: 어머니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차이

정혜린(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장경환(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문민권(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1. 서론

초저출생 시대 정부에서는 지난 제1차~제3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통계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인구의 양적 증가에만 중점을 두어왔다는 비판(정재훈, 2023)을 수용하고 출산 가족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실제로 개인은 출산행위에서 예상되는 효용과 비용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는 경제학적 관점의 ‘합리주의 선택이론’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결정으로, 육아와 관련한 비용이 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지출에서 그 비중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때 출산을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사회자본적 관점에서는 사회, 국가라는 틀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 간의 관계가 출산의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어 후속 출산을 결정하며(김경근, 우석진, 최운진, 2016), 경제성장률이나 육아정책과 관련된 사회구조와 더불어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공동체 문화의 약화 등과 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적 현상 역시 이러한 결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적 증가 계획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여, 가족정책 중심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및 성 평등한 돌봄’을 위한 인프라가 걸음마 수준이지만, 향후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가의 공적 돌봄의 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각 가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수요자 요구에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관련 지원,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다(이지혜, 2023). 맞벌이 여성에게는 생산영역

의 유급노동과 재생산 영역의 무급노동(가사 및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노동시간 및 현물·현금 중심의 정책들이 다양하게 실시되었다(이진우, 2022). 선행연구에서는 양육수당이 취업 여성들에게 가구 내 주양육자로 회귀시킬 수 있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윤미례, 김태일, 2017; 홍승아, 2011) 지적하였다.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출생률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되지 못한다는 결과(민규량, 이철희, 2020)에 비추어 볼 때 저출생 현상에 대한 단편적 또는 선형적인 인과관계식 접근 방식(김수정, 2019)보다 수요자 중심에 적절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방향은 먼저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잠재계층의 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대한 잠재계층의 각 계층별 특징은 어떠한지 파악하여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의 잠재계층에 따른 영아교육보육 비용지원정책의 필요성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K-ECEC-P)’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1차년도(2022년) 본조사의 데이터 중 총 258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가.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해당 문항은 정책특성 중 시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어머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재택근무제 등에 대한 이용 여부를 포함한다.

나. 어머니의 영유아보육교육 비용지원정책 필요성

해당 문항은 향후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보육 및 교육 비용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정도를 측정하며, 영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유아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 초등돌봄 지원의 문항을 포함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가설모형에 대한 검증을 위해 Mplus 8.9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 잠재계층별로 t-검정을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각 잠재계층별 특성을 바탕으로 Class 1은 '일·가정 양립'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Class 2는 육아휴직이 .30의 수치를 보이긴했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육아지원제도 이용률을 나타냈다. 물론 해당 참여자 중에는 맞벌이 여성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 여성들이 경력단절 여성인지 혹은 경제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성인지에 대한 배경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수용하여 '일·가정 분리'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 잠재계층별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정책의 필요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어린이집 연장반 지원($t=3.021$, $p<.01$)과 초등돌봄지원($t=2.188$, $p<.01$)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의 시간지원 중심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이용은 아직까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시간지원 중심 육아지원제도 이용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계층을 구분한 결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없는 경우가 훨씬 높아 우리 사회에서 출산 이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참여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함을 시사하므로, 국가 정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위한 시간지원 중심 육아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다. 현재 한국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를 여전히 시행중이지만, 기존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생애주기 그래프에서 보여준 'M자 형태 곡선'이 아닌 또 다른 추이를 보여주어 현 상황에 적절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시간의 유연화 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 정책의 기능을 고용지향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 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적 측면으로 세분화시켜(김은정, 2012; 최정화, 2023) 보다 실효력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경험이 있는 일·가정 양립 유형 어머니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금중심의 보육료나 학비지원보다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서 가정 대신 돌봄기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영유아 기관 연장반 및 초등 돌봄반 서비스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이미 출산을 경험한 어머니들의 경우 향후 자녀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은 국가의 지원보다 개인 및 가정 안에서 해결가능하지만, 노동시간에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서비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어머니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간 및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class 1으로 분류된 어머니의 경우 맞벌이 어머니임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보완해야 할 연구가 필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성에 대한 영유아교육보육비용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보다 세분화 시켜 분석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가의 초저출생 정책과 더불어 이 연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용하는 어머니의 육아지원제도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국가적인 돌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0~11세까지의 미취학·초등단계의 교육 및 돌봄기능 강화 정책은 이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출산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의 영유아교육비용지원정책에 대한 의견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서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2024년 2학기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확대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